

연구윤리규정

<최종공포일 2024.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른 연구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란 연구개발활동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법적 기준 및 원칙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다.
 - 가. 연구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를 말한다.
 - 나. 일반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일체의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를 말한다.
3. "기본사업"이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연구원이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처리담당부서"란 부정행위 유형별로 검증절차를 수행·지원하도록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5.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조사대상자"란 제보자의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원 주체 및 연구개발의 성격을 불문하고 연구원에

서 수행되는 모든 유형의 연구개발활동(이하 "연구개발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자 등"이라 한다)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체별 책임과 역할

제5조(연구자 등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 등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의 책임과 역할) 연구원은 연구자 등이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규정 제·개정
2.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 절차의 합리적 운영
3. 연구자 등의 부정행위 방지 및 건전한 연구개발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
4. 연구윤리 교육 실시
5. 그 밖에 연구원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설치와 기능) ① 원장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담당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검증절차의 착수와 조사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검증과정의 제보자, 조사대상자, 조사위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및 규정의 제·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 담당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4.01.01.>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01.01.]

제10조(보안유지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자는 위원

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외부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경비 등) 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정행위 검증의 기본 절차

제13조(부정행위 검증 주체) ① 원장은 소속 연구자 등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인 경우 그 검증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의 제보·접수) ① 누구든지 연구원에 부정행위에 관하여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부정행위의 제보·접수를 위한 접수창구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3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01.01.>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제15조(처리담당부서 지정) 제14조에 따라 제보·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원장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연구진실성 확보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처리담당부서로 한다.
2. 일반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사안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처리담당부서로 한다.
3.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에는 처리담당부서가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에는 처리담당부서는 제15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일반부정행위를 검증할 때에는 처리담당부서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조사, 조사결과의 확정 및 보고,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처리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절차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에는 처리담당부서는 제15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 처리담당부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제보내용을 사전에 통지해 주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처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처리담당부서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결과와 확정 및 보고) ① 처리담당부서는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자의 신원은 기록하지 않는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구체적 조사절차 및 조사위원의 소속, 이름 및 전문분야
6. 증인, 참고인 등 검증절차 참여자의 소속, 이름 및 전문분야
7. 조사 결과 및 판단 근거와 후속조치 계획

② 위원회는 제출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확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원장은 관련 연구개발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사보고서(제19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한 경우 재검토 결과를 포함한 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보고하여야 하며, 기본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사항 중 소속과 이름,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원 소속이 아닌 경우 조사대상자의 소속연구기관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재검토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실시여부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처리담당부서는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검증절차를 준용하여 재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출된 재검토 결과에 대해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⑤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재검토 결과를 확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관련 연구개발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재검토 실시 거부 통보를 받은 자는 거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원의 후속조치) ① 원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징계 또는 인사조치
 - 2. 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에서의 참여 배제
 - 3. 참여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연구과제의 참여 제한
 - 4. 관계기관에 고발
 - 5. 그 밖에 부정행위의 재발방지 및 조치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 이외에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보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보자 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62조의3 및 제6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1.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 2. 제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제보자 보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4. 그 외에도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정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조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원장은 연구원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및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조사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장은 관련 법령 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지침」 제15조 제3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 후보자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선정된 조사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중대 사항의 보고) 처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 과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연구참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원장을 통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원장은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회의록 등을 문서, 음성 또는 영상 중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제25조(연구수행 중 자율점검) ① 연구자 등은 진실성 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활동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진실성 보호) ① 연구자 등은 연구개발활동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등은 모든 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수행 :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시험설계·통계기법에 의거한 연구수행 및 진실에 부합한 연구결과 도출
2. 연구자료 기록 : 모든 연구자료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보존하고 위조·임의 변형·삭제 등 조작 금지
3. 연구성과 사용 : 연구계획서 등 작성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구성과를 사용하되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저서 인용 시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필수
4. 연구결과 활용 : 연구결과 공표·활용 시 외부 평판 제고 및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결과 왜곡·과장 금지

③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자 등이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성실한 학문교류를 위한 노력) ① 연구자 등은 연구성과물의 가치 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해 연구결과물 발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표시 : 연구개발활동의 학술적·기술적 기여자에게만 저자 자격 부여 및 연구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저자표시 순서 결정
2. 사사표시 : 저자 이외 직·간접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한 주체에 대해서만 사사표시
3. 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연구개발활동 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다른 관행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해당 관행 인정)
4.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저자 자격이 있는 특수관계인에 게만 저자 자격 부여 및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시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사전 고지 준수
5. 건전한 학술활동 : 부실학술지 논문 투고 및 부실학술대회 참석 금지
6.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의 무단 유출 금지
7. 국제교류 시 정보보호 :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등 교류 시 비밀유

지 및 관련 법률 준수

② 원장은 연구자 등이 성실한 학문교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① 연구자 등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의 신고,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등에 따른다. <개정 2023.01.01.>

제29조(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윤리) ① 연구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자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간대상 연구의 심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0조(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연구자 등은 연구개발활동 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안 발생 시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연구윤리 교육) ① 원장은 연구자 등에게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연구책임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① 연구자 등은 연구실의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상호 존중과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구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자 간의 연구윤리 관련 논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2.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관리
3. 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4. 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제보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3.01.01.>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1.0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